

● 특별기고

지속가능한 시민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철학과 전략

임길진

미시간주립대학교 석좌교수, KDI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Oriental Environmental Values to Build a Sustainable Civil Society

Lim, Gill-Chin

Professor of Geography Michigan State University

Distinguished Institute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먹이시 : 먹이사슬

나는 오직
긴 사실의 한 고리.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고
비가 물이 되어
나는 그저
한 방울의 물.

나는 단지
긴 끈의 한 오라기.

푸른 잎이 낙엽되고
낙엽이 걸음 되고
걸음이 나무 되고
나무가 잎이 되어
나는 그저
한 나무의 잎사귀.

나는 겨우
큰 축대의 한 돌부리.
씨가 나무 되고
나무가 꽃이 되고
꽃이 열매 되고
열매가 씨가 되어
나는 그저
작은 씨.

I. 머리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먹고 입고 자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연자원을 획득하고, 기술을 사용하고, 노동을 투입하고, 폐기물을 배출시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흔히 많은 국가들은 물질적인 성장을 피하는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복지를 측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일인당 국민총생산(GNP)라는 개념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재화의 생산, 분배, 소비과정은 자연을 변형시키고, 원하지 않는 부산물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부수적 폐해는 결과적으로 인간이 누리는 전반적인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를 추구하는 공공정책은 자연환경의 보존을 경제성장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 흔히 많은 사람들은 환경보존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거나, 고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경제발전과 상충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한국을 비롯하여 개발도상국들이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진하던 시절에 목격한 바와 같이 환경보존은 국가개발목표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되었다.

그러나, 자연이 대규모적으로 파괴되고, 그 영향이 전세계적으로 퍼져, 급속한 물질적 발전이 전체적인 인간의 복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차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했고, 환경보존을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태동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모임과 기구들이 창설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국제적 움직임들은 여러 나라의 국가발전에 대한 공공정책수립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지만, 아

직도 많은 나라의 공공정책은 환경보존을 경제발전과 대등한 국가목표로 제시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대개 명목상으로는 환경보존을 국가목표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예산의 집행이나, 제도적 장치의 수립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환경보존은 뒤로 물러난다.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에서, 80년대 후반부터 고약된 환경의식은 시민환경운동을 낳게 하고, 환경을 전담하는 정부부처를 만들게 하였으나, 아직도 환경보존은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와 대립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진정한 시민복지사회를 만들려면 전 세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환경에 대한 철학을 확립하고,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21세기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II 절에서 국가경제발전에 관한 여러 이론을 살펴보고 세계적인 성장 추세와 환경문제를 정리해본다. 제 III 절은 환경문제를 둘러싼 철학적 배경을 설명한다. 제 IV 절은 국제적인 환경에 관한 제도적 발전과 변화를 개관한다. 제 V 절에서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은 지방 의제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을 열거하고 환경경영전략모형을 제시한다. 제 VI 절은 거시적 측면에서 민간 안보와 관련하여 환경부문에 대한 국가투자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석한다.

II. 환경과 경제발전

1. 이론적 배경

세계 2차대전이 끝난 후 승전국과 패전국을 막론하고 많은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주요한 국가적 목표로 삼고 국가 총생산의 확대를 노력해 왔다.

경제발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경합하고 있지만 아직도 무엇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주로 신고전주의적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시도해왔다. 자유시장에서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상관관계로 설명되는 이러한 이론은 수출주도형 산업화 정책이나 생산 능력의 확대정책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최근 신고전주의적 학자들은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축적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Mankiw 1995).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개발기관들은 대체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입장을 펴 왔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국가들의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어떤 학자들은 수출주도형 성장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고 국내소비를 기반으로 한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Thurow 1998).

자본주의 경제이론은 재화의 생산과 분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외부효과(Externalities)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사회비용과 사적비용의 괴리(Divergence between social and private costs)를 빚어내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자발적 합의나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현상이나 협약이 제정되고 환경에 관한 정부의 규제나 세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구소련연방(USSR)과 그 위성국가들은 오랫동안 마시스트 이론(Marxism)을 이념적 바탕으로 삼고 관료적 통제경제(Command economy)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소련연방의 해체는 통제경제의 실패를 역사적으로 증명했고 소련, 동유럽국가들과 중국은 시장경제로의 변환을 실시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과거에 그들은 모든 경제운용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과정에서 공해 없는 산업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전부 내부화(Internalize the

externalities)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서방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성장률 향상에 급급했던 소련은 극심한 환경의 파괴를 자초했다. 체르노블 사건 등이 보여준 소련의 열악한 환경관리상태는 때로는 생태적 살상행위(Ecological genocide)라고 불려지기도 했다.

마시스트 이론은 종속이론(Cardoso 1972, Evans 1979, Lim 1985)과 세계체제이론(Wallerstein 1979) 등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이론들은 세계적인 틀 속에서 중심국가와 주변국가의 경제적 종속관계가 경제적 성장과 후진성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이론들은 아시아나 남미국가들의 후진성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나 네 마리의 용으로 상징되는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그 이론의 역사적 보편성을 상실하게 하였다.

종속이론이나 세계체제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후진국의 환경문제는 중심국가들이 자국의 발전을 위해 후진국의 자원을 채취하고 공해산업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 나라의 환경문제는 세계적인 생산, 분배, 소비의 과정 속에서 이해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발전이론은 정부의 간섭을 없애고 시장기능 위주로 경제를 운용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한편, 네 마리의 용들 중에서 싱가포르, 대만, 한국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어떤 학자들은 강력한 정부가 경제성장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Evans 1995, Evans, Rueschemeyer and Skocpol 1985, Im 1987).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이론이 환경문제에 관해 특별한 이론이나 정책을 제시한 바는 없다. 대만이나 한국의 경우 경제개발초기에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환경보존을 등한시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달성된 이후 환경에 대

한 국가적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에 있어서 기술은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근본으로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최근 Krugman(1994)을 위시한 몇몇 학자들은 아시아국가들이 이룩한 급속한 성장은 생산수단의 양적 동원에 의한 것으로 기술의 발전과 적용이 적은 성장이었으며, 따라서 아시아의 기적은 하나의 신화(Myth)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닌 수십 년간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들은 앞으로 성장속도가 현저히 둔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발생한 많은 외부효과와 공해 등은 효율성이 낮은 경제성장의 바람직하지 않은 부산물 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이론들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동서양의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은 문화가 경제발전,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사회변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아시아의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서구 선진국의 발전과 대비시켜 분석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보다 넓게는 문화의 역할과 관계하여 사회변화 뿐 아니라 문명충돌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Gong 1977, Huntington 1993, Ingleson 1996, Mahubani 1995). 문화결정론은 환경에 관한 철학이 환경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2. 세계적 환경문제

전후 약 40년간 세계경제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세계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1950년대에는 연간 4.9%, 1960년대에는 5.2%, 1970년대에는 3.4%, 1980년대에는 2.9%을 기록했다. 세계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현상이다. 일인당 연평균성장률도 1950년대에는 3.1%, 1960년대에는 3.2%에서 1970년대에는 1.6%, 1980년대

에는 1.1%로 점차 떨어지고 1990년대 초에는 -0.3%로 성장 아닌 감소를 기록하였다. (Brown et. al. 1995, p.13)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선진국의 성장이 느려진 반면 개발도상국의 성장이 가속화하였다. 특히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지칭하는 ANIEs(Advanced 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은 연평균 5%에서 10%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성취했다.(IMF 1993)

선진국이나 후진국이거나 간에 경제성장이 계속되는 동안 환경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공해의 피해가 확산되었다. 표 1은 환경문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8대 국가들(E8: Eight environmental heavyweights)의 환경 관련 지표를 정리한 것이다.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을 비롯하여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이 세계 인구의 56%, 총생산의 59%, 탄산가스배출의 58%, 산림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가 의미하는 것은 이들 8개국의 경제개발, 공공정책, 환경정책, 협의 사항등이 세계적인 환경문제의 발생과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 표는 선진국들은 그 인구에 비하여 더 많은 재화를 생산, 소비하고 더 많은 공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에 대조적으로 후진국들은 인구에 비해 훨씬 적은 생산과 소비, 그리고 공해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선진국들은 세계적인 환경문제, 세계적인 외부효과 해결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명과 자연을 해치는 끔직한 환경재앙들도 선진국들의 산업화과정에서 먼저 목격되기 시작했다. 일찍이 1930년 벨기에에 있는 뮤즈계곡의 철강공장발전시설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많은 사상자를 낸 것은 환경재앙의 고전적 사례이다. 그 후 1950, 60, 70 연대에 런던과 로스엔젤레스의 스모그(Smog)현상, 일본의 미나마타병, 미국의 다이옥신 피해, 러브카날 등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나타났다. 어떤 환경연구가들은 이러한 재앙

표 1. 환경문제 8대 국가(E8)의 환경관련지표

(단위: %)

국가	세계인구 중 비율 1996	세계총생산중 비율 11994	세계탄산가스 배출량중 비율 1995	세계산림 면적중 비율 1990	세계꽃피는식물 총수중 비율 1990
미국	5	26	23	6	8
러시아	3	2	7	21	9
일본	2	17	5	0.7	2
독일	1	8	4	0.3	1
중국	21	2	13	4	12
인도	17	1	4	2	6
인도네시아	4	0.7	1	3	8
브라질	3	2	1	16	22
E8 총계	56	59	58	53	-

자료출처: Flavin, Christopher (1997). "The Legacy of Rio." Brown (1997). p.8에서 재인용.

들이 정부나 시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고 정책적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시민운동을 전개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또는 유일한 계기가 되었다고도 말한다. 이상적인 것은 정책담당자나 시민환경운동가들이 환경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예방적(Preventive)이고 미래창조적인 변환(Future inventive transformation)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류전체의 환경복지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인명을 손상하는 재앙이 터져야 의식이 개혁되고 합리적 정책이 수립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며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문제는 어떤 한 지역이나 나라가 그 경계선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인 경제성장 추세 속에서 지구라는 하나의 큰 땅덩어리는 급격한 그리고 예기치 않은 생태학적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여러 분야에 걸쳐 그리고 여러 나라의 정책결정자들이 함께 다루어야 할 정책적 과제를 던져 준다. 환경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세계적 추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첫째,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와 산림황폐(Deforestation)는 지구의 생태적 조건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단의 연구자들은 산림의 개발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현상들은 지구의 온도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지구는 엄청난 환경적 재앙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둘째, 오존(Ozone)층의 감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분무용 화학약품(CFC)이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오존층은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존층의 파괴는 지나친 양의 자외선을 지구에 통과시킴으로써 피부암과 같은 질병을 촉발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산업화에서 비롯된 공장의 매연이 비와 섞여 만들어 내는 산성비(Acid rain)의 문제이다. 산성비는 바람의 영향으로 인하여 장거리를 움직인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및 유럽 제국 사이에 산성비의 문제는 심각한 국제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앞으로 중국의 산업화가 촉진되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산성비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의 환경을 크게 해질 수 있다.

넷째, 고형폐기물의 처리에 관련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형폐기물은 대체로 지상매장이나 지하매장, 또는 소각 등을 통해 처리되어 왔다. 그

러나 매장할 땅이 거의 없어지게 됨에 따라 쓰레기를 바다에 투입(Ocean dumping)하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으며 고형폐기물의 수출이라는 국제적인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핵폐기물의 처리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력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경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대만이 북한에 폐기물을 수출하려고 해서 빚어진 사내는 폐기물처리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시사해준다.

다섯째, 이러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 국에서 환경보존을 외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고 있다.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환경보존을 위한 이익집단의 숫자가 늘어났고 정부가 설치한 환경관계 관료조직 또한 증가하여 왔다.

여섯째, 계속되는 인구와 자원의 격차 문제들을 들 수 있다. 세계 인구는 지금 60억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불량한 주거상태 속에서 굶주리고 헐벗은 채 살고 있다. 이러한 인구-자원의 격차는 지구환경 보전에 큰 압력을 주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수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III. 환경가치관과 환경문제

1. 서구적 환경가치관의 문제점

한편, 여러 가지 환경재앙과 확대되는 환경문제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철학을 되씹게 하였다. 물질문명의 확대를 주도해온 서구세계는 공리적이고 정복적인 환경가치관에 의해 이끌려왔다. 흔히 서구적, 홉스적(Hobbesian) 또는 유대그리스도교적(Judeo-Christian) 환경가치관으로 불리는 이 관점은 인간이 자연을 인간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물질적, 실용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서구적 자연관에 생태적 위기의 책임을 돌리는 사

람들 중의 하나인 White, Jr.는 오늘날 인류가 당하고 있는 생태학적 위기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과 그 적용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그에 따르면 환경에 대해 인간이 취하는 행위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우리들의 개념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 또는 새로운 개념을 발견해 내기까지는 제 아무리 많은 과학기술이 적용되어도 소용없다.

2. 생태학적 환경가치관의 등장

이러한 서구적 환경가치관에 대한 반성으로 1970년대 이후 퍼져 나가기 시작한 환경가치관은 생태학적 환경가치관(Ecological environmental values)이다. 이 가치관은 인간이 자연을 보존하여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유행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있는 개발이라는 개념도 자세히 살펴보면 비록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 철학적 바탕을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서양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한 사례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우선 깊은 생태학(Deep Ecology)을 들 수 있다. 깊은 생태학은 원래 1973년 Arne Naess (1973)가 “얕은 생태학 운동과 깊고 장기적인 생태학 운동”(“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s”)이라는 논문에 처음 발표되었다. Arne Naess는 서구세계가 추구하는 자연을 정복하려는 개발방식은 자연의 파괴를 초래했고, 따라서 인류는 좀더 심각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태학적 균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행동 속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내스의 이러한 주장은 그 후 1985년 George Sessions가 쓴 깊은 생태학이라는 책에 더욱 자세히 소개되었다. 깊은 생태학과 같은 생각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서양에서 환경보존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오늘날 많

은 환경운동이나 환경정책에 중요한 철학적 배경으로 적용되고 있는 생태학적 환경가치관의 역사적 배경은 동양적 철학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동양세계는 환경문제를 논의할 때,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또는 환경교육을 실시할 때, 외국의 예를 들거나, 외국문헌만을 참고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3. 동양적 환경가치관의 재음미

동양적 환경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서구적 환경가치관과 다른 점은 자연의 창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이라는 말의 풀이가 그렇듯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지배적, 상위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자연 관계’도 인간과 자연의 대립 또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우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의 일치 또는 인간의 자연에의 귀속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서양적인 인간 우위의 이원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양적 사상의 중요한 배경을 이루어 온 유가(儒家)는 그 탐구대상을 인간의 일에만 두고 인사의 모든 근거를 천명에 귀착시킴으로써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필연으로 받아들인다. 그런가 하면 도가(道家)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주장하여 작위성과 인위성을 철저히 거부하고 자연적 질서에의 순응을 강조한다. 노자는 “사람은 땅을 규범으로 하고, 땅은 하늘을 규범으로 하며, 하늘은 도를 규범으로 하고 도는 자연을 규범으로 한다.”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는 말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상위 개념으로서의 자연을 강조했다. 노자에 따르면 자연을 창조할 수 있는 자연보다 상위의 존재는 없으며 자연이 최우위에 선다. 따라서 서양적 자연관이 인정하는 창조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장자(莊子)의 〈산목편〉(山木篇)을 보면 “사람이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사람”[有人天也, 有天

亦天也]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장자는 이로써 “인간과 자연은 하나임”[人與天一也]을 주장한다.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일치관계는 열자(列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열자의 “천서편”(天瑞篇)을 보면 승(丞)이 순(舜) 임금에게 “인간은 자연의 축소판”(是天地之委形也,)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역시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뜻이다.

요컨대 동양적 환경가치관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고 자연에 대해 겸허한 자세를 취하며 자연을 최상의 주격 존재로 인정하여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간섭을 경계한다. 이러한 태도는 자연의 운동을 자연 자체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의 자기 조절능력을 인정하는 생태학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동양적 환경가치관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과 자연은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려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멸의 행동인 것이다.

동양사상이 지닌 자연과 인간을 조화시키는 동양적 환경가치관은 불행히도 동양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적용되지 못했다. 일본이나 소위 신흥산업국가들(NICs :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의 개발과정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동양의 근대화는 서양적 자연정복관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환경파괴행위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환경위기에 관한 세계적인 사고와 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생겼다.

IV. 제도적 발전

1. 스톡홀름에서 리오데자네이로까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산발적이거나 국제적으로 토의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였다. 그리고 마침내 국제연합(United Nations) 주최로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최초의 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었다. 선진국들이 주도한 이 모임에서 아직 물질적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후진국들은

환경보존이 경제성장에 끼칠 영향을 걱정하여 환경보존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 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계속되면서 양대 진영은 군비의 확충과 세계적 패권의 제패에 주력하였다. 미국은 GDP의 약 6% 이상 소련은 15% 이상을 군사비에 충당하면서 환경에 대한 투자는 GDP의 1%에도 못 미치는 아주 미미한 상태였다.

1980년 후반에 들어서 겨우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으로 CFC, Halon 등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1987, 1989), 유해폐기물을 규제하는 바젤협약(1989, 1992), 탄산가스등을 규제하는 기후변화방지협약(1992, 1994) 등이다. 이러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제한적이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 수는 128, 바젤협약은 52, 기후변화방지협약은 50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런 협약들이 내세우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세계환경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는 확실치 않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협약들의 철저한 준수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왔다. 이러한 협약에 가입하고 협약내용을 준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책담당자들이 국민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스톡홀름회의가 열린 지 20년 후인 1992년에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다시 U. N. 주최로 세계환경회의(U. 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다시 열렸다. 지구정상회담(Earth Summit)이라고 불려진 이 모임은 스톡홀름회의와는 몇 가지 다른 국면을 보여주었다. 우선 후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일단은 환경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1992년 모임은 정부대표들의 공식적 회의와 병행하여 시민단체(NGO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의 모임이 있었다. 회의의 구체적 합의사항을 묶어 놓은 의제 21(Agenda 21)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적 지속가능

한 개발전략(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을 작성하게 되어있다. 1996년까지 117개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수립을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치했다(Brown 1997).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클린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에게 미국이 미래세대를 희생시키지 않고 현재세대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1996년 지속가능한 미국(Sustainable America)라는 책자를 통해 환경과 개발에 대한 미국의 국가적 비전과 행동지침을 만들어 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특이한 것은 환경의 질에 관한 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가 백악관 직속이라는 점이다.

2. 지방아젠다21 계획지침

1992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아젠다21이 작성되는 동안 지방환경선도를 위한 국제심의회(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는 아젠다21이라는 세계적 행동계획이 지방단체에도 확실히 적용되기를 원했다.

아젠다21의 제28장을 보면, 지방정부들이 각각 지방적인 행동계획을 만들어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환경선도를 위한 국제심의회(ICLEI)는 그 후 약 5년간 33개국에 있는 1,300 여 개의 지방정부에서 지방적 행동계획을 집행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또 ICLEI는 최근 몇 년 동안 지방계획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교육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여오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ICLEI가 만들어 낸 지방 아젠다21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사회사업 모형(MCP : Model Communities Programme)인데 이 사업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지역, 유럽, 라틴아메리카, 북미 등에 있는 14개의 지방정부들이 각기 사용한 지방계획방법을 함께 실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1996년 ICLEI는 지방 아젠다21 계획지침(Local Agenda21 Planning Guide)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의 부제인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입문서”(An Introduc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Planning)라는 표현이 제시하듯 이 책자는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실시해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V. 도시, 지역, 국가를 위한 지속가능성의 정의와 전략적 적용

1. 지속가능성의 정의 확대

1987년 결성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결성되었다. 흔히 위원장 이름을 따라 브룬트랜드 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이라고 불리는 이 모임은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세대들이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들이 자신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to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the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또 세계은행의 한 문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다(World Bank 1988).

“경제발전, 가난의 제거, 그리고 건설한 환경관리는 많은 경우 상호 일관성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economic growth, the alleviation of poverty, and sound environmental management are in many cases mutually consistent objectives.”)

위의 두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는 경제발전을 초점으로 하고 환경보존을 추구하는 비교적 협소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보다 확대된 다섯 가지 지속가능성을 다음에 열거한다.

- (1) 경제적 지속가능성(Economic Sustainability)
- (2) 제도적 지속가능성(Institutional Sustainability)
- (3) 생태적 지속가능성(Ecological Sustainability)
- (4) 기술적 지속가능성(Technological Sustainability)
- (5) 문화적 지속가능성(Cultural Sustainability)

2. 확대된 지속가능성의 전략적 적용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도시들이 지방의제21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수립은 주로 서양문헌이 제시하는 비교적 협의적으로 정의된 지속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역사, 자연, 문화를 보다 깊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의 다섯 가지 지속가능성을 전략계획에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경제적 지속가능성
 - (가) 성장과 형평
 - ① 꾸준한 경제성장
 - ② 부의 공평한 분배
 - ③ 무능력자와 의존인구의 보호
 - (나) 도시 및 지역성장의 논리
 - ① 규모의 경제
 - ② 집적의 경제
 - ③ 비교우위
 - (다) 재정
 - ① 효율적 재투자
 - ② 부채관리
 - ③ 간접자본투자계획

- ④ 재정적 독립
- (라) 분야별 계획
 - ① 토지
 - ② 주택
 - ③ 교통·통신
 - ④ 교육
 - ⑤ 건강
 - ⑥ 위락
 - ⑦ 환경
 - ⑧ 동력·자원
 - ⑨ 안전·질서
- (마) 계획연관성
 - ① 국가계획과의 관계
 - ② 인접지역과의 관계
- (2) 제도적 지속가능성
 - (가) 위계적 제도의 연관성
 - ① 국제기관과의 연관성
 - ② 국내기관과의 연관성
 - ③ 도시 및 지역 내부기관단체와의 연관성
 - (나) 수평적 제도의 연관성
 - ① 인접지역과의 연관성
 - ② 타 도시 및 지역(국내)과의 연관성
 - ③ 타 도시 및 지역(국제)과의 연관성
 - ④ 민간단체-정부협조체제
 - ⑤ 기업-정부협조체제
 - ⑥ 학계-정부협조체제
 - (다) 제도설정 및 변환
 - ① 행정제도의 설정 및 역동적 변환
 - ② 입법제도의 설정 및 역동적 변환
 - ③ 사법제도의 설정 및 역동적 변환
 - (라) 민주적 결정체제와 동의형성
 - ① 시민참여제도의 확립
 - ② 협상제도의 공식적·비공식적 운용
 - ③ 중재제도
 - ④ 기타 갈등해소제도의 활용
- (3) 생태적 지속가능성
 - (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① 환경철학의 파악
 - ② 국제동향(ISO 14000등)
 - ③ 국내동향(환경친화관계 법령 등)
 - ④ 환경보호운동
 - ⑤ 환경영향평가
 - (나) 공해대책
 - ① 대기
 - ② 수질
 - ③ 고형
 - ④ 핵폐기물
 - ⑤ 소음
 - (다) 수용능력
 - ① 생태학적 수용능력
 - ② 경제적 및 여타 수용능력
 - (라) 동력
 - ① 에너지 수요
 - ② 에너지 공급
 - ③ 분야(산업, 주거, 상업 등)별 계획
 - ④ 원자력 발전문제
 - ⑤ 생태적 발전기술
 - (마) 위락공간
 - ① 위락공간수요
 - ② 위락공간공급
 - ③ 국제위락
 - ④ 국내위락
 - ⑤ 도시 및 지역위락
 - ⑥ 근린지역위락
- (4) 기술적 지속가능성
 - (가) 환경과학기술도입
 - ① 지식적 과학기술(Software)도입
 - ② 설비적 과학기술(Hardware)도입
 - ③ 환경친화적 과학기술도입
 - (나) 환경과학기술개발
 - ① 지식적 과학기술(Software)개발
 - ② 설비적 과학기술(Hardware)개발
 - ③ 환경친화적 과학기술개발
 - (다) 환경과학기술적용

- ① 지식적 과학기술(Software)적용
- ② 설비적 과학기술(Hardware)적용
- ③ 환경친화적 과학기술적용
- (라) 환경과학기술교육
 - ① 지식적 과학기술(Software)교육
 - ② 설비적 과학기술(Hardware)교육
 - ③ 환경친화적 과학기술교육
- (5) 문화적 지속가능성
 - (가) 환경가치관 및 일반환경교육
 - ① 정부
 - ② 민간단체
 - ③ 기업체
 - ④ 학교
 - ⑤ 일반시민
 - (나) 환경정보
 - ① 환경가치관-의식조사
 - ② 환경정보체제(DB)
 - ③ 환경통신체제
 - ④ 인터넷의 활용
 - (다) 환경문화시설 및 행사
 - ① 환경센터
 - ② 국제행사
 - ③ 국내행사
 - ④ 지역행사
 - ⑤ 도시 및 지역행사
 - ⑥ 근린지역행사
 - ⑦ 공익방송·공익신문광고
 - ⑧ 환경학술활동
 - ⑨ 환경캠페인

필자는 특히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요소는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문헌에 나와 있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사회의 문화적 행태는 그 사회의 경제적, 제도적 틀을 만들고 환경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깊은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생태계에 대해 취하는 행동 또한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지속 가능한 시민사회의

구현을 위한 필수적 요소다. 최근 UNESCO는 문화와 사회가 지닌 관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UNESCO, 1998, 2000).

3. 전략적 모형

이제 이 글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모형을 도표 1에 제시한다. 이 환경경영전략모형은 환경철학, 세계적 동향 구체적 제도 등을 배경으로 하고 일반계획이론을 응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최근 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Reengineering, TQM, CQI, JIT 등 여러 가지 경영도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실상 이러한 모든 도구들은 막스 베버(Max Weber) 이후 등장한 여러 가지 계획이론들이 꾸준히 발전시켜온 개념들에 근거하는 것으로 아이디어의 역사(History of Ideas)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색다른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계획, 경영, 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개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Efficiency), 공평하게(Equity), 책임감 있게(Accountability), 그리고 제도적 변화(Institutional Change)의 가능성을 가지고 성취하느냐 하는 것이다.

- (1) 이 모형의 제일 위 부분에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철학이 존재한다.
- (2)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세계적, 국가적, 지방적 환경 및 개발문제를 파악한다.
- (3) 이러한 전반적 상황 파악을 근거로 관련규정, 배경, 이해집단을 분석한다.
- (4) 행정주체는 환경전담반을 구성한다.
- (5) 조직의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의 설정은 관련 이해집단,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실시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권장한다.
- (6) 목표가 설정된 후 장기전략계획과 위기관리 및 중장기계획의 두 가지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전략계획은 대안작성, 분석평가, 집행·통제의 계획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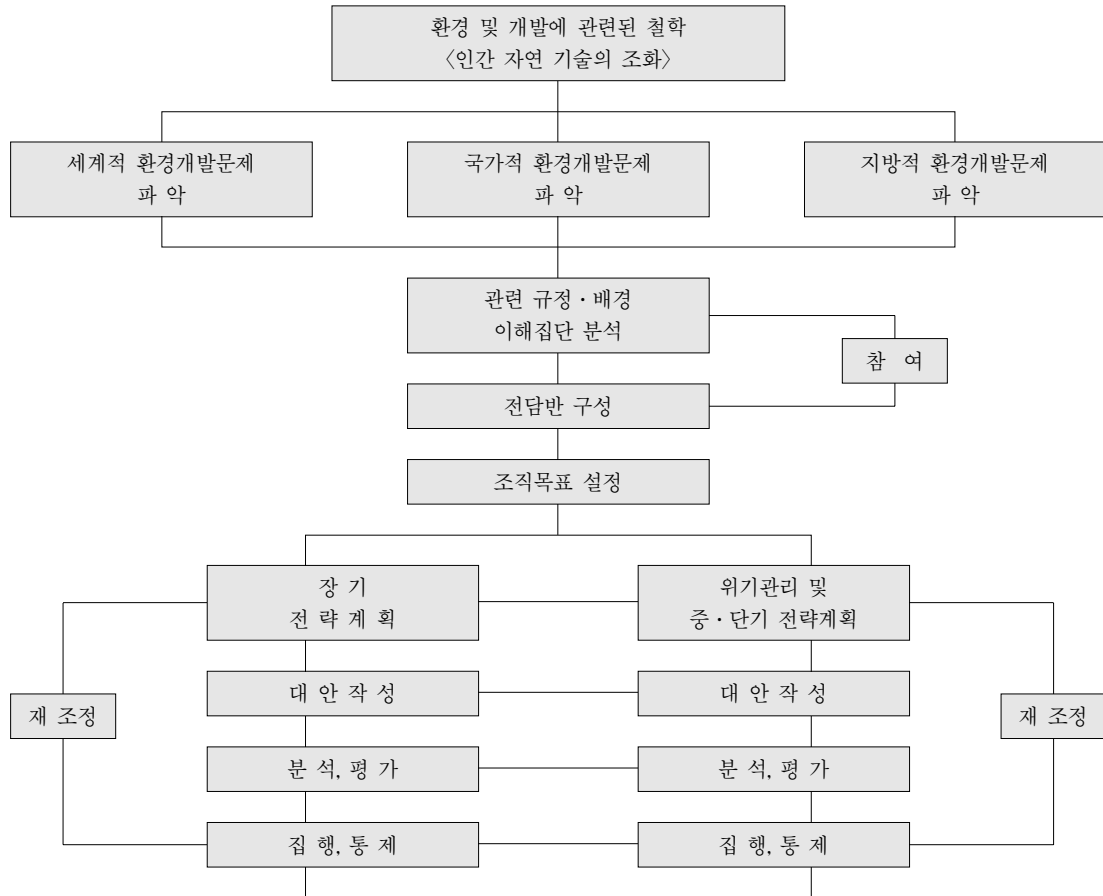


도표 1.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모형

리한 계획절차는 지속적인 재조정을 통해 수정되어야 한다.

4. 모형집행을 위한 고려사항

위에 제시된 전략적 모형은 일반적인 것이다. 국가 또는 어떤 지방단체나 국가기관이 이 모형을 사용할 때는 그 조직의 규모·예산능력·정치구조에 따라 원래의 모형을 변형시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략적 모형에 따라 수립된 행동계획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일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 (1) 환경개발관리전문가 양성
- (2) 환경과학기술전문가 양성
- (3) 협상 및 중재전문가 양성
- (4) 환경관리 및 과학기술개발
- (5) 지속가능성·환경개발 등에 대한 일반인을 위한 교육
- (6) 지속가능성·환경개발 등에 대한 특수집단 (예 : 어린이, 학생, 여성, 교사를 위한 교육)
- (7) 협상과 중재에 대한 일반인을 위한 교육
- (8) 협상과 중재에 대한 특수집단을 위한 교육
- (9) 정보체제의 확립
- (10) 정책결정체제의 과학화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정부,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정보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전략전담반은 정보기술의 가능성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정보기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조직들은 정보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정보기술은 사회 모든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정부, 군사, 교육, 기업, 민간활동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 다양한 정보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 도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지식과 정보의 획득, 축적, 정리(Knowledge): 데이터베이스(Data Base), 정보체계관리(Management of Information System),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 전자도서관(Digital Library), 홈페이지(Homepage), 유스넷(Usenet),
- (2) 의사소통(Communication): 인터넷, 전자우편(E-mail), 원격회의(Teleconferencing), 음성우편(Voice Mail), 전자계시판, 전자대화광장
- (3) 정책결정(Decision-Making): 전문체계(Expert System), PERT, CPM.

환경분야에서도 이러한 기술적도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VI. 환경투자의 국가우선순위

1. 환경투자 추이

흔히 환경투자에 소극적인 경제발전론자들은 환경투자가 다른 생산적인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학자들이 1976년에 환경보존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보고한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보면 환경투자는 GNP나 고용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공해제거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져오는 소득 확대효과가 가격효과가 가져오는 GNP의 감소보다 크다는 것이다(Lim 1988).

환경투자의 효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분석해 볼 것은 거시적 국가투자우선순위다. 표 2는 OECD 소속국가들의 GDP 대비 공해제거 및 방지비용(PAC: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백분율을 보여준다. 미국의 0.6%, 캐나다의 0.7-0.9%, 일본의 0.9-1.0%, 프랑스의 0.5-0.6%, 독일의 0.7-0.9%, 영국의 0.4-0.9% 등 전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표 3이 보여주듯, GDP 대비 공해제거 및 방지비용은 0.79%에서 1.27%로 추정되고 있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슷한 형편이다. OECD가 정의한 공해제거 및 방지비용은 정부와 민간 지출을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환경예산과는 그 범위가 다르다.

표 2. 공해제거 및 방지비용 국제비교 (단위: %)

국 가	연도			
	1985	1990	1991	1992
미 국	0.6	0.6	0.6	0.6
캐나다	0.7	0.9	0.7	-
일 본	0.9	1.0	-	-
프랑스	0.6	0.5	-	0.9
독 일	0.7	0.8	-	0.8
영 국	0.7	0.4	-	-

자료출처: OECD (1993, 1996), 김홍균(1997)에서 재인용.

표 3. 한국의 GDP 대비공해제거 및 방지비용 (단위: %)

	1992	1993	1994	1995
김홍균 임종수 추정	0.99	1.00	1.02	1.27
한국은행추정	0.79	0.81	0.81	0.83

자료출처: 광태원(1997)에서 재인용.

얼마만큼의 환경투자가 국가발전과 국민복지향상에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가에 대한 적정투자규모연구는 아직 없다. 다른 분야--예를 들면 주택분야--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투자규모 결정모형을 설정한 예가 있다. 환경투자 결정에 관한 이론과 경험적 연구는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2. 민간안보의 확보

한 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기 높은 국민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사기를 높게 유지하려면 군사안보(Military Security)와 함께 민간안보(Civil Security)를 보장해야 한다. 민간안보를 보장하려면 주택복지, 건강복지, 교육복지, 환경복지등 각부문의 복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향상되어야 한다. 환경의 보존 없이 총체적 안보를 유지하기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군사비와 국가발전에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결과를 내어놓았다. Knight, Norman과 Villanueva(1995)는 군사비의 절감은 경제성장률을 현격히 높여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을 창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군사비절감은 장기적으로 동유럽의 경우, 총생산을 50%, 중동지역은 46%,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은 30내지 40%, 섬사하라 아프리카는 10%, 산업화된 선진국은 20% 증가시킬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 몇 가지 결론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환경투자가 경제발전에 해가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환경투자비용을 높이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가능하다. 둘째, 군사비지출비용을 적정화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면 환경복지를 비롯한 전체적인 국민복지의 향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출비용이 낮아지면서 절대비용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군사비의 평화적 전용은 그 실천이 쉽지 않다. 국제기관의 동기부여, 국가간의 협의, 시민의 의식고양등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국제협약의 후속으로 환경보존을 위한 군사비의 전용에 관한 국제협약을 기대해 본다. 군사비의 평화적 전용은 국민의 소비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997년 이란의 카타니 대통령이 앞으로 매년 군사비의 일부를 사회복지향상을 위한 민간부문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란은 이라크와의 적대관계 속에서 높은 군사비를 지출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비의 평화적 전용을 언급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민간안보를 높이는 발상이 여러 국가에서 실현된다면 인류는 지속 가능한 있는 세계시민사회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 설 수 있을 것이다.

VIII. 요약

이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경제발전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둘째, 경제발전에 관한 여러 이론들이 있다. 어떤 한 이론도 경제 발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경제발전의 영향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증거가 있다.

넷째, 지속가능한 시민복지사회를 만들려면 동양적 환경가치관의 재발견과 적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1972년 스톡홀름 회의이후 환경보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발전이 있었다. 그중 Agenda 21의 실천은 정부와 시민에게 중요한 움직임이다.

여섯째, 더 넓은 지속가능성 즉 5 가지 지속가능성의 적용을 권장한다. 특히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실천이 중요하다.

일곱째, 국가투자를 적정화하면 환경투자비율을 높이면서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덟째, 지속가능한 시민복지사회를 만들려면 개인과 단체가 전략계획의 실천을 일상화해야한다.

참고문헌

1. 광태원. (1997). II-2. 우리 나라 환경예산정책에 대한 고찰. 노상환 (1997)
2. 김홍균. (1997). VI-1. OECD 국가들의 환경지출 규모 및 추이. 노상환 (1997)
3. 노상환 편. (1997).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한국환경기술개발원.
4. 노상환. (1997). I. 서론 및 요약
5. 류상열, 이건영, 박양호 공편. (1997). 국토 21세기. 나남출판.
6. 아태환경연구원. (1996). 환경경영시스템의 표준화 동향의 적용.
7. 임길진. (2001). 21세기의 도전: 계획과 전략. 나남출판.
8. 임길진, 최열 편. (1995). 환경운동, 사회적 책임 그리고 국가변환. 환경운동연합출판국.
9. 최병두. (1995) 환경사회이론과 국제환경문제. 도서출판 한울.
10. 허남훈. (1995). 국가발전과 환경. 동화기술.
11. 홍유수. (1995). 동북아 지역기술협력체의 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 Bailey, Ronald. Ed. (1995). The True State of the Planet. New York, NY: The Free Press.
13. Balassa, Bela. Ed. (1981).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in the World Economy. New York, NY: Pergamon Press.
14. Brown, Lester R., et al. (1993, 1994, 1995, 1996, 1997). State of the World, 1993, 1994, 1995, 1996, 1997.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15. Cardoso, F. H. (1972).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New Left Review 74: 83-95.
16. Chomsky, Noam.. (1994). World Orders Old and New.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7. Chow, Paula and G. C. Chow. Eds. (1997). Asia in the Twenty First Century: Economic, Socio-Political, Diplomatic Issues. River Edge: NJ: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Pte. Ltd.
18. Conable, Barber B. (1989). Annual Address by Barber B., Conable, th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Group, Summary Proceedings. 1989 Annual Meetings of the Board of the Governors, Washington, DC: World Bank.
19. Copp, David and David Zimmerman. Eds. (1984). Morality, Reason and Truth. Totowa, NJ: Rowman & Allanheld.
20. Costanza, Robert. Ed. (1991). Ecological Economics: The Science and Management of Sustainabil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1. Devall, Bill. (1985) Deep Ecology. Salt Lake City: Gibbs M. Smith, Inc..
22. Ehrlich, Paul R., and Anne H. Ehrlich. (1990). The Population Explosio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3. Epstein, Samuel S. M. D., Lester O. Brown, and Carl Pope. (1982) Hazardous Waste in America.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24. Evans, P. (1979). Dependent Development: The Alliance of Multinational, State and Local Capital in Brazi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5. Evans, P. (1995). Imbedded Authorit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ress.
26. Evans, P., and D. Rueschemeyer and T. Skocpol.

- Eds. (1985).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 Gong, Yooshik. (1997). *Culture Matter? Limit and Implications of Cultural Explanations on Asian Development*.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arching for an Asian Development Model. June 27, 1997. Beijing, China.
 28. Huntington, Samuel. (1993).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72(3), 22-49.
 29. Im, Hyug-Baek. (1987). *The Rise of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in South Korea*. *World Politics* XXXIX(2): 231-57.
 30. Ingleson, John. (1996). *The Asian Ethic in Bell, Roger, Tim McDonald and Alan Tidwell Eds. Negotiating the Pacific Century*. St. Leonard, Australia: Allen and Unwin
 31.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 (1996). *The Local Agenda 21 Planning Guide*. ICLEI, IDRC, and UNEP.
 32.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97). *The Military Balance 1997/8*.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3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3).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34. Kim, J. I. L. J. Lau and J. S. Park. (1996). *The Role of Intangible Capital in the Economic Growth of East Asian 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Seoul, Korea: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35. Kim, Sun G. et. al. Eds. (1995). *Papers of the Second ASEAN-Korea Workshop*. Seoul, Korea: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Korea.
 36. Knight, Malcolm Loayza, Norman and Villanueva, Delano. (1995). *The Peace Dividend: Military Spending Cuts and Economic Growth*.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king Paper WP/95/53.
 37. Krugman, P.(1994). "The Myth of Asian Miracle." *Foreign Affairs* 73(6), 62-78.
 38. Lim, Gill-Chin and Jack Williams. Eds. (1993). *Korea: Its Political and Economic Future*, East Lansing, MI: Asian Studies Center, Michigan State University.
 39. Lim, Gill-Chin. (1983). "Environmental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A Case of International Movements of Polluting Industries," (with J. Le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3, Nos. 1-2, 159-173.
 40. Lim, Gill-Chin. (1985). "Theory and Practice of EIA Implemen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Comparative Stud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133-153.
 41. Lim, Gill-Chin. (1988). "From Negligence to Preven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in Developing Countries," *Urban Law and Policy*, 9, 1-19.
 42. Lim, Gill-Chin. (1989). "State and Society: Some Reflections on Theory and Theory Building."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7, 475.
 43. Lim, Hyun-Chin. (1985). *Dependent Development in Korea*. Seoul,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44. Mahbubani, Kishore. (1995). *The Pacific Way*. *Foreign Affairs*, 74, 1, 100-111.
 45. Mankiw, Gregory. (1995). "The Growth of Nation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September 1995.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46.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1993, 1996). *Pollution Abatement and Control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OECD Environmental Monograph.

- 1993, 1996.
47. Naess, Arne. (1973).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A Summary." *Inquiry* 16: 95-100.
 48. Pezzey, John. (1992),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s: A Economic Analysis*. Washington, D. C.: The World Bank.
 49. Potter, Van Rensselaer. (1988). *Global Bioethics: Building on the Leopold Legacy*.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50. 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1996). *Sustainable America: A New Consensus for Prosperity, Opportunity and a Healthy Environment for the Future*.
 51. Rolston, Holmes III. (1989). *Philosophy Gone Wild*. Buffalo: Prometheus Books.
 52. Serageldin, Ismail (1994). *Water Supply, Sanitation,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Financing Challenge*. Washington, D.C.: World Bank.
 53. Simon, Julian L. Ed.(1995). *The State of Humanity*.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Inc..
 54. Thurow, Lester (1998). *Asian Collapse: Cause and Cure*. New York Review of Books. Vol. XLV. No. 2. February 5, 1998.
 55. 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Settlements (UNCHS: Habitat). (1996). *An Urbanizing World: Global Report on Human Settlements 199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56. UNESCO. (1998) *World Cultural Report: Culture, Creativity and Markets*. Paris, UNESCO.
 57. UNESCO. (2000) *World Cultural Report: Cultural Diversity, Conflict and Pluralism*. Paris, UNESCO.
 58. Wallerstein, I. (1979).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59. White, Jr. Lynn. (1967).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60. Williams, Maurice J. and Patti L. Petesch. (1993) *Sustaining the Earth: Role of Multilateral Development Institutions*. Washington, DC: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61. World Bank. (1981).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Private Sector*. Washington, DC: World Bank.
 62. World Bank. (1988).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mplementing the World Bank's New Policies*. Development Committee Pamphlet 17. Washington, D.C.: World Bank.
 63. World Bank. (1992, 1993, 1994, 1995, 1996). *World Development Report 1992, 1993, 1994, 1995, 1996*. Washington, DC: World Bank.
 64. World Bank. (1996). *Sustainable Transport: Priorities for Policy Reform*. Washington, DC.: World Bank.
 65.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England
 66. von Zharen, W. M. (1996). *ISO 14000: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al Standards*. Rockville, MD: Government Institutes, Inc.